

“1조2000억 규모 인공태양 입지, 나주 최종 확정”

한국연구재단, 전북 이의신청 ‘불인정’

전남도·나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예정

1조2000억원 규모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입지가 나주시로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입지 평가에서 2위를 한 전북특별자치

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10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이날 전북도의 이의제기에 대해 ‘공정성에 이상이 없다’며 불인정 취

지의 결과를 통보했다.

재단은 공문에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공고된 기본 방향 등에 따라 유치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평가는 공고된 사업 부지 선정 절차를 준수해 실시했으며로 공정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입지 선정 결과 발표에서 최고점을 받은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공단 일원을 최종 연구시설 입지로 나

정됐다.

이 일대는 100만㎡ 이상 평탄지로 규모 조건(50만㎡)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부지 전체가 견고한 화강암 지반으로 구성돼 있고 최근 50년간 지진 등 자연재해 기록이 거의 없는 점이 큰 강점으로 평가됐다.

핵융합 연구시설은 2027년 착공해 2036년 완공을 목표로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제사업이다.

연구시설 조성 이후에는 약 300개 기업 유입, 최대 1만 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10조원 이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연구시설 조성·운영 기관인 과기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조만간 전남도, 나주시와 연구시설 부지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검토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인공태양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

들어지는 원리를 모방,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바다에 있는 중수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연료가 무궁무진하다.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고갈 위기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남도·목포대·순천대 “대학통합·국립의대 신설 총력” 전남도는 10일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와 함께 대학통합 및 국립의과대학·국립대병원 신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대학이 지난해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진’에 합의한 이후 교명 선정과 교육부 통폐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대학통합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통합 추진의 안정적 이행과 정부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이후 관계 부처·국회·정당 등을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이어왔으며, 향후 통합대학과 함께 실질적인 개교 준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전남도

광주운전면허시험장서 자율주행차 시험·평가 한다

최첨단 VR시험장·주행코스 등 갖춘 ‘AI센터’ 구축

2027년말 개관 목표…교통·안전 신기술인증 제공

광주 북구에 건립 중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자율주행차 시험과 평가가 가능한 최첨단 시험장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총 사업비가 기존 370억원에서 82억원 증액된 452억원으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증액된 82억원에는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분 79억원(감리비 30억원, 건축공사비 49억원)과 AI센터(모빌리

티 인증센터) 설계비 3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대규모 시험장인 1급지로 추진됐으나 공사원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당초 예산으로는 2급지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부예산에 82억원이 증액되면서 1급지 규모와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북구 삼각동 일원에 연면적 4만210

㎡ 규모 건립, 2027년말 준공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광주운전면허시험장에는 AI 모빌리티 시험·평가·인증이 가능한 ‘AI모빌리티 인증센터’도 새로 구축된다.

‘AI센터’는 정보기술(IT) 기반 운전면허평가시스템과 가상환경(VR) 평가시험장이 도입되며, 시험장 내 주행시험코스를 활용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시험·평가 체계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자율주행차의 주행능력 평가를 위한 가상현실(VR) 시험장, 3만평 규모의 자율주행시험장(PG) 조성,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전문가 양성센터, 미래

교통안전시설시험연구센터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인증·시험·평가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AI 모빌리티 인증 기반시설이 확보되면 자율주행차, 실의 이동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뿐 아니라 교통·안전 시설 사업자에게 신기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설창자 시 교통운영과장은 “운전면허시험장이 개관하면 면허시험과 경신을 위해 나누까지 이동해야 했던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 정상화로 지역경제 회복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의회,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16일 의결 유력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정례회기 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의결 시점은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이 유력하다.

김태권 전남도의회 의장은 10일 “소관 상임위에 규약안 재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도의회는 광역연합 출범을 반대하지 않았다”며 “합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 만큼 내부 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전남 본회의에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이번 회기 내 규약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언급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규약안 상정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삭감됐던 운영예산 15억원은 예비비 활용을

통해 복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16일 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광역연합 추진은 새 정부의 ‘5국3특’ 정책에 따라 8월 광주시·전남도와 양 시·도 의회가 출범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규약안 마련 등 절차가 진행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규약안 의결을 보류했다. 당시 도의회는 △출발 일정의 속도 △양 의회 의원 정수 차이에도 동일한 연합의원 구성 △도내 지역 의원 차이 △지방선거 이후 출범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예산 15억원도 삭감했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관련 예산도 승인했다.

5국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지역별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정부 구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민주당 호남 예산’서 계속

아울러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 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행동도 보고 있다”며 “민주당의 도 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당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와 지도부, 호남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김관영 전북지사 등 광역단체장들도 참석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호남권 예산 내역이 공개됐다.

한정재 정책위의장은 직접 성과보고회를 통해 ‘역대 최대 예산 확보’, ‘신규 사업 반영 및 증액’ 등의 성과를 나열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 호남권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확보했는데 이렇게 시작해 2027년에는 좀 더 발전시키고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엔진을 확보하는 데 신경 썼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AI), 인공지능 전환(AIX), 우주미래차, 사회기반시설(SOC) 등 급진화 사업에 더해 5·18 관련 예산, 기초생활 및 안전 분야 등에도 예산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를 국가 AI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AI 모빌리티 시범 도시로 선정된 광주에서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200대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고위에 이어 호남발전특위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 중 호남 관련 반영 부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